

정부, '美 무역법 301조' 전략 대응... "기업이익 보호 총력"

대외경제장관회의

新통상협정 추진전략 등 논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장
구윤철 "새로운 개발금융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적한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

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

응사례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델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대응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안정화 정책, 수급안정화 정책,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시장 진출 뒷받침을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자본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1면 '기업들 돈 줄...'서 계속

회사채 신용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연쇄충격 우려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 확보라면 반길 일이다. 기업으로선 장기자금을 일시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상환일·금리를 확정된 만큼 자금 계획을 세우기도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경우는 다르다. 현금 흐름이 나쁜 부실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두고 "기업의 돈줄이 말라 붙었다"고 판단할 '리트머스지'로 보는 이유다.

그나마 회사채 빚이라도 낼 수 있다면 다행이다.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의 '2026년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신용등급별로는 2월 발행한 회사채에서 신용등급 'BBB'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AA' 등급 이상 우량물 비중과 'A' 등급 비중이 각각 65.6%, 30.8%에 달했다. 기관투자자는 통상 신용등급이 A+ 이하일 경우 내부 규정상 투자를 제한하기도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업종과 만기, 금리 수준에 따라 회사채 '옥석 가리기'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이른바 '빚 돌려막기'가 금융시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회원국 기업들의 차환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신규 차입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부채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지 않은 채 이어지는 데 그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높은 금리 수준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기 삼성증권 팀장은 "회사채보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 금리로 조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국면"이라며 "회사채 순상환으로 부족한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김정관 장관, 반월·시화산단 방문... "공급망 관리 최선"

산업부 석화분야 등 현장중심 대응 매점매석 금지·수급조정 규정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반월·시화산단 생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필수 산업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납사(나프타) 도입 비용 6744억원을 지원하고,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규정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13일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단 내 석유화학 제품활용 기업 4개사를 릴레이로 방문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관련 생산·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

다. 이번 점검은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의료용품, 식료품 포장재, 반도체, 페인트 등 국민 생활과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대덕전자(반도체 PCB 기판), SP삼화(조선·자동차·주택용 페인트), 에이디캡테크(주사기·수액제 포장재), 롯데패키징솔루션즈(식료품 포장재) 등 4개 기업을 차례로 방문했다.

에이디캡테크에서는 수액제·주사기 포장재 수급 차질 우려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필수품 공급 안정의지를 강조했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에서는 식료품 포장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중기부·식약처 범부처 태스

크포스(TF)를 통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P삼화에서는 지난 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원료 수입이 신속해진 점을 설명하며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대덕전자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생산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핵심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라며 "산업부와 소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핵심 품목 수급 관리를 위해 4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

하고 재고 및 수급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을 통해 중동 외 지역 납사 수입 지원에 674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부 소관 1조980억원 규모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신속히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제품은 의료·생활필수·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라며 "현장 중심 대응으로 공급망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당정 "6월까지 추경 예산 85% 집행"

車 보험료·유류비 부담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총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하는 방안을 보험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의 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와 특위 3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 추경 26조 2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

련해 지금 2부제·5부제를 해서 그만큼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조와 관련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우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청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주요 소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metro

고용부,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

중동 수출기업 등 고용유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중동 수출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4165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해 청년 일자리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13일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2주 휴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폭격이 계속되고 해협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공급망 충격이 일 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요건 판단 기

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하여 즉각 위기를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그리고 중동수출사업주 등에 대해 매출액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확정된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4165억원은 중동전쟁의 위기로 부터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 충격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